

IT분야 중소기업 금융지원방식에 대한 정책 제언

고경일
백석대 경상학부

A Proposal of Alternative Financial Supporting Policy on IT-related Small & Medium sized Enterprises

Kyung-II Khoe

Division of Business & Commerce, Baekseok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간접지원사업과의 연계 및 시너지 창출을 염두에 두고 IT분야 중소기업의 필요를 적절히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융지원방법에 대해 그 대안 및 정책적 적용여부를 제안하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대표적인 직접지원 방식인 용자지원과 관련하여 기존사업의 개선점들을 살펴보고 외국의 용자정책사례를 벤치마킹함으로써 종합적으로 대안적인 용자방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투자방식을 통한 직접지원정책을 함께 고려한 대안적 금융지원 방식에 대해서도 살펴보므로써 IT분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정책을 총체적으로 진단하고 있다.

주제어 : IT 중소기업, 금융지원정책, 벤치마킹, 용자지원정책, 투자방식

Abstract This paper proposes several alternative government financial supporting policy on IT-related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First, this paper considers reforming factors relating to current financial supporting policy and studies foreign government supporting loan programs through benchmarking so as to derive alternative financing supporting policy. Secondly, this paper analyses several investment supporting policies on IT-related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Finally, new Korean government financial supporting policy on IT-related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is collectively diagnosed by putting comprehensive analyses together in this paper.

Key Words : IT small & medium sized enterprise, financial supporting policy, benchmarking, supporting loan program, investment supporting policy

1. 서론

최근 IT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은 직접적인 자금지원사업에서 벗어나 간접지원사업 위주로 편성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IT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자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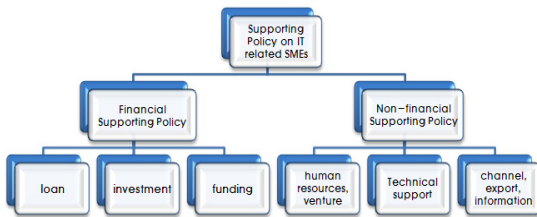
원사업이 갖는 정책적 한계로 인해 시장개입을 최소화하면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구 노력의 결과라 할 수 있다. 특히, IMF구제금융 이후 또는 한미 FTA 체결 이후 외국으로부터 요구되어지는 한국정부의 기업에 대한 직접지원 자체노력 촉구로 인해 과도한 시장개입에

Received 14 October 2013, Revised 5 November 2013
Accepted 20 November 2013
Corresponding Author: Kyung-II Khoe(Baekseok University)
Email: kyungil@bu.ac.kr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대한 비난을 피하고자 직접지원의 확대는 조심스러워 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금융지원은 사업성과의 측정이 가능하고 하향식 지원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전략분야 지원에 있어서는 배제할 수 없는 산업 육성정책이 되어오고 있는 현실이다. 한편, 인력양성·기술지원·정보화지원과 같은 간접지원사업들은 사업의 대내외적 타당성이 높고 시장경쟁원리에 부합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사업의 효과를 측정하기 어렵고 전략적 선택에 의한 중점지원이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 간접지원사업에만 의존할 수는 없는 입장이다.



[Fig. 1] Government's Supporting Policy on IT related SMEs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자금지원정책별 장단점을 잘 고려하여 사업 포트폴리오를 최적화함으로써 정부의 시장개입을 최소화하면서 정책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현안과제를 잘 풀어가야 할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간접지원사업과의 연계 및 시너지 창출을 염두에 두고 IT분야 중소기업의 필요를 적절히 지원해 줄 수 있는 직접(금융) 지원방법에 대해 그 대안 및 정책적 적용여부를 제안하고자 한다.

2. 본론

정부의 IT중소기업에 대한 직접(금융)지원정책 중 출연(funding)은 R&D기술력을 기반으로 하는 중소기업들의 후속기술 개발 및 사업화에 도움을 주고자 시행하는 무상지원의 개념인 데 비해서 융자 및 투자 방식은 원리금 및 자본이익의 환원을 염두에 둔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이러한 융자 및 투자 방식에 초점을 맞추어 효과적인 지원정책을 조사·분석함으로써 정책대안을 제안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 전개하고자 한다.

2.1 용자지원정책

2.1.1 기존 용자사업 유사발전 방안

정부 정책융자금융 중 IT기업의 R&D 기술개발을 목표로 지원되고 있는 유일한 용자지원사업인 NIPA의 IT 응용기술개발지원용자사업을 예로 들어 사업의 존속필요성 인지 하에 용자사업을 유지·발전시키고 제도적인 안정화를 앞당기기 위한 지원시스템 개선 및 고도화 방안을 정리하고 지속적인 변화를 통해 사업의 효과성 내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융자금 규모의 확대, 무담보 신용대출제도의 도입, 우수과제 및 성공과제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의 개선요구 사항이 매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제도개선이 요망되고 있다. 예산 확대를 위해 기재부 및 지경부 등 정부부처와 지속적 협의를 추진하는 한편,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정책적 지원의 필요가 높은 분야에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 외 무담보 신용대출제도는 신용평가 및 기술평가의 엄정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확대시행되어야 하며, 우수과제 및 성공과제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는 타 정책금융지원사업과의 연계 및 기금 내 사업간 연계 등을 통해 발전시켜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

둘째, 기술 등 무형자산 의존도가 높고 물적 담보능력이 부족한 R&D 중심의 IT초기기업들은 매출실적 저조 등으로 인해 금융기관이 지원을 기피하는 실정이므로 기술보증기금과 연계한 기술담보대출 위주의 지원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아가야 한다. 정보통신진흥기금의 IT응용기술개발지원용자사업의 경우 기술담보기업의 기술적·경제적성과 및 고용창출효과 등에서 일반담보기업에 비해 높은 성과를 보여주는 등 기술담보비율의 지속적인 확대 필요성 및 타당성을 뒷받침해주는 분석들은 여러 연구결과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NIPA, 2013).

셋째, IT중소기업의 성장단계 및 기술수준 등을 고려한 정책자금 지원 규모 차등화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IT중소벤처기업의 창업 및 성공적 시장진입에 초점을 두고 있는 저위험-저비용 기술개발에 대한 기술담보대출의 지원한도는 10억원 미만으로 조정하는 반면, 중견 IT중소기업의 선도적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고위험-고비용 기술개발에 대한 일반담보대출은 과제당/업체당 30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도를 설정하는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용자지원규모가 축소되고 선착순 수시 접수에 의한 지원경향 등으로 인해 다양한 기업에게 지원혜택이 돌아갈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업체당 용자잔액 총 한도제 설정’ 또는 ‘3년내 수혜기업의 추가지원 제한’ 등의 제도개선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용자수혜기업에 대한 설문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용자지원사업 선정이 용자금 지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기술개발, 인력확보, 마케팅, 판로개척, 투자기회제공, 사업화 등 다양한 간접지원책과 연계하여 Total Care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여야 한다. 즉, 기업 성장발전의 성공(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자금 확보(부족), 인력 확보(부족), 판로 확보(문제) 등의 필요를 단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체계정비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다섯째, 정부지원사업의 시너지 효과 창출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NIPA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유관기관들의 연계지원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기술개발단계의 용자지원만으로 수혜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보장하기에는 역부족이므로 성과 우수기업 및 성공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의 타 용자지원사업 연계방안을 수립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근본적으로 용자지원사업들을 IT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및 IT산업의 고도화를 지향하는 공공성향의 중장기사업으로 인지하여 지속적인 재원조달 확대를 유도하여야 한다. 최근 들어 IT분야의 급속한 발전 속도로 인해 새로운 트렌드의 기술사업분야(빅데이터, IoT, 클라우드 컴퓨팅, 차세대 반도체/디스플레이, 스마트홈가전/서비스, 소셜미디어, 태블릿 등)가 속출하고 있어, 이러한 기술발전과 더불어 향후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IT산업·연구개발·사회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과 기술개발 리스크가 큰 과제들에 대해서는 민간기관이 부담하기에 역부족인 경우들이 많다는 점 등이 정부 차원의 장기적 지원 필요성을 절실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2.1.2 외국 용자사업에 대한 벤치마킹

용자지원정책의 사업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IT중소기업 용자지원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외국(미국, 독일, 일본)의 사례를 살펴봄으

로써 제도적인 보완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외국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 제도 현황 분석을 통해 국내 정책금융과 비교하여 어떠한 차별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의 정책금융은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이원체제로 지원되며, 연방정부의 금융정책은 SBA(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에 의한 시중은행 및 금융회사 등의 대출보증이 중심인 반면, 주정부의 정책금융은 고용의 유지·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적을 둬으로써 지역에 따라 용자중심, 보증중심, 용자·보정의 병행 등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정책금융에 대한 성과평가의 지표로서 ‘용자의 실시에 따라 확보되는 고용인수’가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고용 1인당 25,000~35,000달러를 기준으로 대출액을 결정하는 프로그램 등이 그 예라 하겠다. SBA(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에 의한 보증 프로그램은 리스크가 높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가능할 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요구에 즉각 대응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조달코스트(cost)가 높고 대출절차가 복잡하며, 금리 이외의 보증료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주정부의 용자 프로그램 또한 신용이 낮아 은행만으로 대출이 어려운 업체들의 접근이 용이하고 민간금융기관보다 유리한 조건의 차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절차가 복잡하고 심사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SBA는 보증을 통한 중소기업 금융지원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보증비율을 대출액의 75%, 보증료를 대출액의 3.0%로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징수하고 있으며, 주정부는 보증업무뿐 아니라 직접용자도 실시하되 대출 및 보증기간을 지역에 따라 3년(운전자금)에서 15년(건물취득, 사업확대)까지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고, 대출액 상한도 10만달러(운전자금)에서 200만달러(건물취득, 사업확대)까지, 금리 또한 고정금리로 2.75%에서 4.25%까지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KODIT, 2008).

독일의 경우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기업의 99%(매출액은 40%이상)를 넘고 있는데 은행차입 중심의 타인자본이 주를 이루고 있는 자본구조의 특성상 신용이 낮은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독일의 중소기업 정책금융시스템은 부흥은행(KfW)의 간접용자, 연방 및 주정부의 보

증은행에 관한 재보증,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지원 등 3가지로 크게 구분된다. 중소기업에 대한 독일 정책금융의 핵심은 민간금융기관이 부흥은행(KfW)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마진률을 가산하여 심사실행 후 중소기업에 대출하는 민간융자라 할 수 있으며, 연방 및 주정부는 16개 민간 보증은행이 실시한 보증에 대해 재보증을 통해 지원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부흥은행(KfW)의 간접융자는 독일 중소기업에게 저리의 장기 고정금리 대출상품을 제공해 준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KfW 담당자와의 직접 대면기회가 없어 상품에 대한 이해가 상호간 충분하지 않을 우려를 주고 있다. KfW는 민간금융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공적자금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다는 인식에 향후 민간금융기관 등의 요구에 부응하는 시스템을 확충한다거나 중소기업 당사자들의 필요를 파악하는 등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다. 부흥은행(KfW)의 중소기업 융자 방식은 대개 온렌딩(On-Lending) 방식으로서 KfW가 민간은행에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민간은행은 기업을 심사·선별하여 대출을 공급하는 간접적인 방식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상품인 사업대상 론(Undermehmekredit)은 융자한도 500만 유로(약 70억 원), 융자기간 10년(최장 20년), 거치기간 2년(3년 가능) 등으로 되어 있고, 자금의 용도는 주로 설비자금투자로 알려져 있다(KODIT, 2006).

일본의 중소기업 정책금융제도는 2006년 5월 26일 시행된 행정개혁촉진법 이후 대대적인 개편을 통해 중소기업금융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온 중소기업금융공고(JASME) 등 4개 기관을 일본정책금융공고법(Japan Finance Corporation Law)에 의하여 일본정책금융공고로 흡수 통합하여 이루어졌다. 일본정책금융공고는 출연기관이 아닌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되었으며, 경영투명성 제고, 조직의 간소화 및 효율화, 이용자 편리성 향상을 도모한 유일한 일본중앙정부의 정책금융기관으로 존재하고 있다. 정책금융은 중소기업 지원, 해외자원 확보, 일본의 국제경쟁력 강화의 범위 내에서만 행한다는 기본원칙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작고 효율적인 정부 실현을 위해 정책금융을 축소하는 한편 정책금융기관의 완전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책금융기관의 경우 경영합리화 추구방안으로 부분보증제도, 증권화(securitization) 지원, 간접대출 등의 방법을 통해 민간금융기관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일본 신용보

완제도는 52개 지역신용보증협회가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에 신용보증을 제공하고 중소기업금융공고가 신용보증협회의 신용보증을 신용보험의 형태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 지방정부의 신용보증과 중앙정부의 신용보험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2원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중소기업금융공고는 지역별 신용보증협회의 신용보증에 대해 신용보험을 제공함으로써 신용보증의 리스크를 70~80% 보전해 주고 있는 바, 신용보증제도를 통한 중앙정부의 중소기업금융지원이 적극적임을 알 수 있다(KODIT, 2008).

현재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정책금융은 일반적으로 은행에 기금을 예치시키고 이 기금을 간접적으로 중소기업에게 대출하는 것으로, 은행이 중소기업을 평가하고 대출하며 손실위험을 100% 부담하는 대신 취급수수료를 수취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시장친화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은행입장에서는 손실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담보를 비롯한 채권보전조치를 하고 대출을 수행하다보니 결국 우량기업 위주로 대출이 이루어져 신용도 및 담보력이 약한 우수 기술력 확보 중소기업들에 자금이 공급되도록 하는 정책자금 본연의 목적이 퇴색되어 우량기업에 대한 이자보조금 성격으로 밖에는 작용하지 못할 우려를 낳고 있다.

독일이 도입하고 있는 온렌딩(on-lending) 방식에 의한 정책금융에 따르면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업체선정, 신용평가, 대출실행, 자금회수 등을 감당하도록 위임되 손실위험에 대한 책임을 정부가 최소한 50% 이상 부담함으로써 민간은행의 대출취급을 원활하게 해주고 지원 목적에 타당한 기업선정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벤치마킹 노력이 요구되어지는 상황이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대리대출이 간접지원방식이라는 측면에서는 온렌딩 방식과 매우 유사하나 위험을 분담하지 않고 민간은행이 100% 부담한다는 측면에서 온렌딩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미국, 독일 등의 중소기업 정책금융은 낙후지역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보조금 형태를 금지하고, 저리의 융자도 제한하는 등 시장기능을 보호하고 시장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구가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 중소기업 정책금융이 차치 이자보조금 내지 우량기업에 대한 역차별로 인한 시장교란 원인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우리

정부의 융자지원사업도 혁신적인 IT기술 개발자금의 지원이라는 사업목적은 강조하는 한편, 지원과제의 기술혁신성과 지원기업의 개발능력을 엄정히 평가함으로써 융자지원 및 저리 제공이 IT기술개발 가능성 평가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결정된 것임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독일을 포함한 유럽이나 미국의 정책금융기관들이 융자지원사업의 성과평가 지표로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대개 고용 유지 및 창출효과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중소기업을 고용창출 및 경제성장의 동력확보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정부가 중소기업의 창업 및 설비투자를 위한 자금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근거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현재 기술적·경제적 성과뿐 아니라 고용효과도 정책금융의 주요 성과지표로 삼고 있는 실정이나 실제로 과제선정이 과제수행기업의 사업화 능력 및 고용정책 등을 반영하여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각 부처별로 정책자금 단위를 관장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 독일,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는 점차 통합된 자금원(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체제로 변모해 가고 있다는 점도 향후 정책자금 운용방식의 변화를 예측하는 데에 참고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일본의 정책금융제도 개편의 결과를 살펴볼 때 우리나라도 현재 과학기술진흥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문화산업진흥기금 등으로 나누어져 각 부처별로 운용되고 있는 정책자금들이 향후 통합기관에 의해 종합적으로 운용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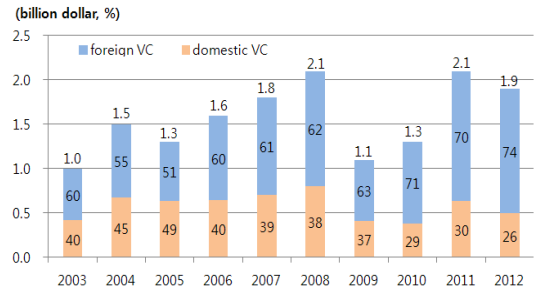
2.1.3 신개념의 복합형 융자지원 방식에 대한 제안

첫 번째로 각 단계별로 융자지원 커리큘럼을 달리 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벤처단계부터 기업성장과정을 아래와 같이 6개의 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커리큘럼을 만들어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 ① 창업기 : 회사를 창업하고 기술/제품을 개발하는 단계
- ② 기술개발기 : 기술개발을 시작하여 추진하는 기술개발 진행 단계
- ③ 시장진입기 : (=기술상용화기) 초기매출 발생
- ④ 성장기 : 매출액으로 경상비를 충당할 수 있는 시기
- ⑤ 성숙기 : 매출 안정화 시기
- ⑥ 정제기 : 뚜렷한 매출성과의 향상이 없이 다소 정체된 제도 약 준비상태

전 단계에서 실적이나 융자를 통해 성과를 내면 다음 단계 지원시 어드벤처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단순히 융자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을 통해 기업성장을 관리하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연구개발 단계의 기업 혹은 개인에게도 적극적인 융자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두 번째로는 해외 투자유치의 증가를 제안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의 벤처캐피탈의 경우 자금 규모도 매우 크지만 요즈마 펀드와 같은 벤처캐피탈을 통해 해외 자금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로 지난 10년간 해외투자자의 VC 자금 투입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여 2012년에는 74%를 차지함으로써 이스라엘 자국 VC 비중(26%)의 세 배에 달하는 비중을 차지하였다.



Source : http://mbnmoney.mbn.co.kr/news/view?news_no=MM11000911813

[Fig. 2] Israel Venture Capital Fund Scale

우리나라도 해외 투자자의 비중을 증가시켜 융자지원을 대체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해외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발굴, 외자유치 전략수립 및 홍보용 IR자료 작성, 국내외 투자로드쇼 개최 비용 지원 등 다양한 제도적 지원이 요망된다. 또한, 성공사례 및 성공프로그램의 개발, 성공메커니즘의 창출 등의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로 중소기업 M&A 등을 통한 투자 회수 활성화를 들 수 있다.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M&A 자금지원을 확대하여 중소·벤처기업의 투자자금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중소기업 M&A 인수금융공급, 세컨더리 펀드¹⁾ 결성 등도 고려할 만 하다. 투자 회수를 쉽게

1) 세컨더리 펀드 : 벤처 신규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창업투자회사 등이 이미 투자했던 벤처주식을 다시 매입해 수익을 올리는 펀드로, '유동화펀드'라고도 함.

함으로써 스타트업 엔젤투자 활성화와 창업 재도전 환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 벤처 생태계 전반의 자금 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간 투자시장을 활성화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기업가치 극대화를 위한 우호적 M&A가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한국은 대기업의 국내 M&A시 많은 행정적 규제와 반M&A 기업 문화에 대응해야 하는 대내외적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벤처기업 M&A에 대기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세계해택뿐만 아니라 대기업 M&A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을 위한 발상의 전환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로 용자의 시스템화 구축을 들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벤처기업 지원은 정책적 제도라기보다는 사회 시스템화되어 있는 경향이 있으며, 창업인큐베이터, NASDAQ, 스톡옵션 등의 발달로 벤처기업이 자연발생적으로 창업·발전하는 선순환구조를 정착시키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기업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다양한 분야에 적절한 용자지원이 필요할 실정임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다섯 번째로 코넥스(KONEX)와 용자사업의 연계를 통한 지원방식도 고려해 볼 만하다. 코넥스(Korea New EXchange)란 코스닥시장 상장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장할 수 있도록 2013년 7월 1일부터 개장한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을 가리킨다. 코넥스 시장은 현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창조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적 장치라고 볼 수 있으며, 창업, 특히 벤처 창업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코넥스 시장이 개장하면서 현재까지 총 21개의 기업이 상장되었는데 이 중 바이오 관련 기업이 5개로 가장 많으며, 반도체 장비 4개, 소프트웨어 기업이 3개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다른 측면에서 중소기업의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부진이 코넥스(KONEX)의 설립배경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대부분의 자금조달을 은행 대출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자비용 부담이 높아지고 부채비용 역시 높아지게 되어 기업에 악영향을 가져오고 있는 실정이므로 코넥스 시장을 이용함으로써 주식발행을 통해 이자비용 및 부채상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able 1〉 Financing Sources of SMEs(2011) (%)

| Bank | Govt. | non-Bank | Equity | Bond | Private | Foreign loan, etc |
|------|-------|----------|--------|------|---------|-------------------|
| 83.3 | 10.6 | 0.9 | 1.1 | 3.2 | 0.4 | 0.6 |

Source : Korea Federation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코스닥시장 및 프리보드의 중소기업 지원기능 미흡도 설립배경이 된다. 코스닥 시장의 지속적인 상장요건 강화로 인해 창업초기 중소기업의 시장 진입이 사실상 곤란하며, 프리보드 시장이 거래소 퇴출기업 진입 등으로 투자자에게 부실기업 시장으로 인식되어 시장기능 자체가 위축된 상태이므로 코스닥 시장과 프리보드 시장의 중심에서 창업 초반기에 있는 중소·벤처기업들이 자본시장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 개설이 추진된 것이라 하겠다. 코넥스 시장은 영국의 AIM(Alternative Investment Market)와 캐나다의 TSX-V(Toronto Stock Exchange-Venture)를 벤치마킹하여, 생긴 자본시장으로써 기대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거래 부진으로 인해 거래량, 거래대금이 감소하여 코넥스시장이 '제 2의 프리보드' 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어 앞으로 코넥스 시장이 더욱 활발해지기 위해서는 참가기업 수를 늘리고, 기업에 대한 정보공개를 투명하게 함으로써 더 많은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코스피나 코스닥에 비해 고위험·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시장인 만큼 초기에는 전문성을 갖춘 투자자들을 유인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코넥스 시장은 상장요건 3가지 중 하나만 충족되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시장인 만큼 코넥스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창업초기의 기업들에게 용자사업과 컨설팅을 동시에 진행한다면, 코넥스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기업이 단계별로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기업이 성장하고 코스닥으로 이전하는 성공사례가 확대되면, 일자리 창출과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기반 구축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2 대안적 금융지원 방식 도입

용자사업과는 별개로 IT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정

책금융으로서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대안적인 금융 지원방안으로 메자닌 금융과 투자융자복합금융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향후 발전적인 금융 지원사업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2.1 메자닌 금융

메자닌(mezzanine)이 중간에 있는 라운지 등의 공간을 의미하는 것과 같이 메자닌 금융이란 주식과 채권의 중간 형태인 메자닌을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기업은 기본적으로 자본이 필요하게 되면 주식과 채권의 형태로 자금을 조달하는데, 최근 M&A 규모가 대형화되고 조달해야 할 금액이 더욱 커지면서 자금 조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부각되고 있다(NIPA, 2012).

메자닌 금융은 주식과 채권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금융이라 할 수 있으며, 은행 및 대출기관이 주식을 통한 자금조달이나 대출이 어려운 기업에게 부동산 등의 고정자산을 담보로 요구하지 않으면서 자금을 제공하고 그 댓가로 기업의 배당우선주나 전환사채²⁾, 신주인수권부사채³⁾ 등을 수취하는 금융기법이다. 메자닌 금융을 통해서 은행 등 대출기관이 출자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기업의 대주주가 되더라도 기업의 경영에는 참여할 수가 없다. 메자닌 금융은 주식과 채권의 혼합이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과 리스크의 크기는 채권보다 높고 주식보다 낮으며 기존의 주식이나 채권보다 더욱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 상품 모두 기업의 자금조달방법을 다양화하기 위해 활용되고 기업인수합병(M&A)시에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 전환권 행사를 하고 나면 '채권'의 지위는 사라지게 되는 전환사채와는 달리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후에도 만기까지 채권을 그대로 보유하게 된다.

회사와 투자자들이 메자닌금융을 선호하는 이유는 최

근 회사가 발행하는 증권이 다양화되고 투자자층이 확대되면서 투자욕구가 세분화·고도화되어 가고 점차 채권과 주식의 명확한 특성이 희석되어 가는 추세라서 벤처기업 등 초기 성장단계에 있는 기업이 제 3자의 자본참여에 따른 소유권 상실의 우려를 최소화하면서 인수/합병, 성장가속화 등을 위한 양질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잇점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를 가지고 회사와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환사채는 사채 발행 회사 입장에선 낮은 이자를 지급하고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주식활황기 때 자금조달수단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전환사채는 일반채권보다 이자율은 다소 낮지만 일정한 이자소득이 보장되는데다 기업의 성장성이 높다고 판단할 경우 전환권을 행사하여 채권을 주식으로 바꿔 주식매각차익을 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선호된다.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사채 발행 회사 입장에서 보면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일반 사채의 이자와 주가상승에 따르는 투자수익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사채이다. 투자수요를 증가시켜 자금 조달을 더욱 촉진시킬 수 있으며 신주인수권에 대한 대가로 낮은 이자율을 주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잇점이 있다. 또한 사채권자들이 추가로 돈을 지불하고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게 되면 사채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추가자금이 납입되어 새로운 자금조달을 도모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사채가 지니는 이자소득기능과 주식이 지니는 자본소득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채에 의한 이자소득과 주식에 의한 배당소득, 주가상승에 따른 이익을 동시에 꾀할 수 있는 방식이라 사료된다.

기업의 성장 동력으로 M&A의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국내 메자닌 시장 또한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 현재와 같이 불투명한 경제상황에서 메자닌 금융은 채권의 안정적 수익을 취하면서도 주식시장의 이득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1석2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2.2 투융자복합금융

기술성과 미래성장가치가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투자와 융자의 장점을 복합 활용하여 저금리 신용대출 형태로 지원하는 투융자복합금융 방식을 고려할 수 있는데 이는 크게 이익공유형 대출과 성장공유형 대출로

2) 전환사채(CB : Convertible Bond):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채로 일정한 조건에 따라 채권을 발행한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으로서 전환 전에는 사채이며 전환 후에는 주식이 되는 사채와 주식의 중간형태를 취한 채권이다.

3) 신주인수권부사채(BW : Bond with Warrant): 미리 약정된 가격에 일정한 수의 새로운 주식을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권리를 부여된 사채이다.

나눌 수 있다(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이익공유형 대출은 저금리 대출 후 지원기업의 영업성과에 따라 추가이자(이익연동)를 수취하며, 반대로 영업손실 또는 당기순손실 발생시 이익연동이자자는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형태의 대출이며, 성장공유형 대출은 전환사채(CB) 등의 주식연계 회사채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인수하는 형태이며,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시에는 자본확충으로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특징을 지닌 대출이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투융자 복합금융 지원사업은 기술개발 및 시장진입 등의 단계에서 미래 성장성을 보유하되 일정수준의 영업이익 달성이 예상되는 기업을 이익공유형 대출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성장공유형 대출의 경우에는 기술성과 미래 시장가치가 큰 기업으로 기업공개 가능성이 있으나 민간 창업투자회사(창업투자조합)가 아직 투자하지 않은 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익공유형 대출은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부에서 신청 및 접수하여 일반 신용대출 방식으로 자금이 지원되고 있으며, 정해진 일정에 따라 원금과 고정이자(신용대출금리-2%)를 상환하고, 영업이익 발생시 추가이자(영업이익의 3%)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지원되고 있다. 이익공유형 대출의 지원한도는 기업당 연간 20억원(운전자금 5억원)이며, 지원기간은 5년으로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운용된다. 이자율은 고정이자 부분과 이익연동이자 부분으로 나누어 운용되는데, 고정이자의 경우 대출시점에서 업력 및 자금사용목적에 따라 기준금리를 차별화한 후 2%를 차감한 금리를 적용하는 한편, 이익연동이자자는 영업이익 발생시 영업이익×3%의 이자금액을 적용하고 있다. 이자부담 최대한도는 대출원금의 40%까지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고정 및 이익연동 이자의 누적액이 연간 8%가 되는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연동이자 적용기준은 국세청 신고 재무제표를 적용하되 대출일이 속하는 매년도 결산기가 적용되며 매 결산기 이후 부과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회수시기는 법인의 경우 결산 기준일 이후 4개월 경과부터 5개월 이내로 지정되며, 개인의 경우 7월 31일까지로 정해진다. 필요시 결산 재무제표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지정하는 회계법인이 회계실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대출기간내 임의조기상환을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성장공유형 대출은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부에

서 신청 및 접수하여 전환사채(CB) 인수방식으로 자금이 지원되고 있으며, 성장이익 공유가능성 등을 판단하여 주식으로 전환여부를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결정하는데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는 경우 중소기업은 만기보장금리로 분할상환하여야 한다. 성장공유형 대출의 지원한도는 기업당 연간 30억원(운전자금 10억원)이며, 지원기간은 5년으로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운용된다. 단, 업력 5년 미만인 기업은 7년 이내(4년 거치, 3년 분할상환)로 운용된다. 이자율은 발행시 표면금리를 1%로 하고, 주식전환이 되지 않은 경우의 만기보장금리는 4%로 고정되어 있다. 전환주식은 상환전환우선주 또는 보통주이며, 전환기간 이내에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고 전환가격은 기업가치에 따라 개별 적용되고 있다. 지원 당해연도부터 회계법인의 외부회계감사를 필수적으로 수감해야 하며, 대출기간내 임의 조기상환을 금지되어 있으며, 자본금 변동 등의 사항은 사전동의를 의무화되어 있다.

투융자복합금융 방식은 넓은 의미에서 메자닌 금융 방식에 해당하는 특수형태라 할 수 있는데, 이렇듯 메자닌 및 투융자복합금융은 향후로도 투자기관 및 투자자 입장에서 시장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있는 복합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상당한 금융지원수단이라 할 수 있다.

현재 메자닌 방식으로 복잡 다양한 금융상품들이 개발되어 운용되고 있으나 IT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대한 정책지원자금의 성격을 띠고 있는 본 사업의 경우 앞서 소개한 전환사채(CB) 및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정도만을 우선적으로 시행해 볼 만하다고 판단되며,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투융자복합금융 방식은 내부적인 지원조건을 본 사업성격 및 수혜기업 특성에 맞게 응용한다면 좋은 대안으로서의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3. 결론

IT산업은 경제성장의 핵심동력으로 자리잡아 왔으며 향후에도 국가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6년간(2007년~2012년)의 GDP성장률이 3.3%를 기록한 가운데 IT산업의 성장률은 8.5%로 나타났으며, IT산업의 GDP 비중도 10.9%를 기록하는 등 IT산업의 GDP성장 기여도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

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IT산업은 주로 중소기업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소기업들의 기술개발 및 상용화 노력에 의해 도출된 결과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고려할 때 IT분야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금융지원은 앞으로도 지속·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Khoe, 2012).

〈Table 2〉 Contribution Ratio of IT Industry on National Economy (%)

| Year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average |
|----------------------------------|------|------|------|------|------|------|---------|
| GDP growth rate(real) | 5.1 | 2.3 | 0.3 | 6.3 | 3.7 | 2.0 | 3.3 |
| - IT industry growth rate(real) | 8.7 | 6.8 | 3.9 | 17.7 | 8.6 | 5.2 | 8.5 |
| - GDP Share of IT industry(real) | 9.5 | 9.9 | 10.3 | 11.4 | 11.9 | 12.3 | 10.9 |

Source : BOK, IT statistics portal(<http://www.itstat.go.kr>)

본 연구에서 제안한 기존 융자지원방식의 보완점들이나 외국 융자사업 벤치마킹을 통해 조사된 온렌딩방식 등의 도입, 그리고 복합형의 융자지원방식들은 현실적으로 우리 정부가 고려해 볼 수 있는 대안들이라 사료된다. 또한, 메자닌 금융이나 투융자복합금융과 같이 투자방식을 혼합한 지원정책 또한 도입 또는 확대를 논의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판단된다.

정부는 정보통신 핵심기술의 내부화와 정보통신산업 자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연구개발 활동 및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는 차원에서 막대한 R&D예산을 마련하고 있다. 2013년도 국가 R&D 예산의 경우 16조 9천억 원으로 금액이 증액된 바 있으며, 과학기술 분야 일자리 창출에 225억 원, 영세 중소 콘텐츠기업 컨설팅 지원에 30억 원의 투입을 시사한 바 있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간접적인 방식이나 출연방식도 함께 포함되어 있겠지만 이렇듯 융자방식이나 투자방식의 금융지원 정책자금도 꾸준히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정책자금의 유용성과 효과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본 연구에서 제시한 것 이외에도 앞으로 부단히 탐색되어야 할 것이라 사료된다.

REFERENCES

[1] BOK, IT statistics portal(<http://www.itstat.go.kr>)

[2] K. I. Khoe, An Analysis on Usefulness of Supporting Loan for Development of Applied Technology and Political Proposal for Improving Outcome. Korean Management Consulting Review, Vol. 12, No. 2, pp. 271-289, 2012.

[3] Korea Credit Guarantee Fund, German SMEs and Government Loan for SMEs. Kodit Research, 2008.

[4] Korea Credit Guarantee Fund, Reforming Japanese Government Loan for SMEs. Kodit Research, 2008.

[5] Korea Credit Guarantee Fund, U.S. Government Loan for SMEs and Current Trends. Sinbo Research, 2006.

[6] Korea Federation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http://www.kbiz.or.kr/>)

[7] NIPA, Analysis on Performance of IT Fund for Promotion. MIKE, 2011, 2012, 2013.

[8] Sungmin Park, Wonsik Sul, Kyung-II Khoe, A Study on Performance Evaluation of Government-Funded R&D Projects with Composite Scores. Korean Journal of Business Administration, Vol. 25, No. 2, pp. 1259-1281, 2012.

[9] http://mbnmoney.mbn.co.kr/news/view?news_no=M1000911813

[10] <http://www.sbc.or.kr/sbc/business/fund/venture11.jsp>

고 경 일(Khoe, Kyung II)



- 2003년 2월 :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경영학박사)
- 2003년 1월 ~ 2004년 2월 : 삼성경제연구소(SERI) 금융실 연구원
- 2004년 3월 ~ 현재 : 백석대학교 경상학부 교수
- 관심분야 : 국제금융, 외환, IT융자 성과분석, 정책금융

· E-Mail : kyungil@bu.ac.kr